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20
2014. 9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2014.8.1~8.31)

건축문화 부문

- 디자인 우수 공공시설물 인증·수상제 시행
- 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요, '시민공감건축상'
- 올해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수상자 탄생
- 2014년 서울시 건축상 대상에 '윤동주문화관'
- 도시경쟁력 강화 모색... 도시정책포럼 개최
- 미래 건축정책에 도민 뜻 담는다
- 국토부, 공간정보 분야 국제컨퍼런스 IC-GIS 개최
- 우리나라, 공간정보 분야 신흥 주도국으로 발돋움
- 10월 공공시설물 대상 디자인 축제 열린다
- 국토교통부 통계정보가 한눈에 '쑹'
- 북한 지도, 이제 내 손안에 있다
- 세계적 권위 베를린 갤러리에 서울 공공건축 6선 걸린다

녹색 건축·도시 부문

- '정부와 업체가 함께' 해외건설 신 시장 개척
- 대전시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발전 시설 보급
- 한국 '건설사업관리제도' 캄보디아서 통했다!
- 홍천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 서울시, '옥상도 에너지다, 옥상햇빛 캠페인' 열어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안전사고 없는 건설업체, 입찰에서 우대한다!
-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방식 확 바뀐다
- 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된다
- 11월부터 건축물 등에 '안전·범죄예방 기준' 의무 적용
- 종합병원 부지에 일반병원, 요양병원 설치 허용된다
-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 간소화, 임대주택용지 탄력적 공급 허용
- 울산시, '수치지형도 갱신'으로 안전한 창조도시 관리
- 전북도 주택개량사업 1조 193억 원 투입 농어가 혜택 지속 확대
- 부산시 도시재생 선도 지역 사업추진협의회 출범
- 서울시, 홍은동에 '청년 공공주택 협동조합' 첫 선
- 대전시, 건설 분야 '안전한 대전' 행보 눈길
- 서울시·자치구 1,000명 규모 생활권계획 참여단 모집

해외건축정책동향

노르웨이 건축정책(2009)

APU Story

한양도성박물관



월간 건축도시정책동향

2014년 9월호 (통권 20호)

-
- 발 행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 발행일 : 2014. 9. 29
 - 발행인 : 제해성
 - I S S N : 2288-274X
 - 편집·인쇄 : 알래스카인디고(주)
 - 기 획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동 706-1호
 - 연락처 : 031-478-9845
 - 이메일 : kslee@auri.re.kr(이경신)
-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 5 이달의 정책 Highlights
- 6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건축문화 부문

- 8 디자인 우수 공공시설물 인증·수상제 시행
- 8 충북도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지역을 위한 디자인 활동 펼쳐
- 9 전남도, 경관 아름답고 쾌적한 도민 공간 창조
- 8 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요, '시민공감건축상'
- 10 2014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 11 국내외 대학생들의 다국적 열린 아이디어를 받는다!
- 12 서울 골목골목, 이야기꽃이 활짝 피었네!
- 12 올해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수상자 탄생
- 13 2018 세계목조건축학술대회 서울 유치 성공
- 14 2014년 서울시 건축상 대상에 '윤동주문학관'
- 15 도시경쟁력 강화 모색... 도시정책포럼 개최
- 16 미래 건축정책에 도민 뜻 담는다
- 16 '정감 있는 우리 마을' 직접 디자인해 봐요!
- 17 2014 한양도성문화제 '마을에서 인문(人文)을 묻다'
- 18 국토부, 공간정보 분야 국제컨퍼런스 IC-GIS 개최
- 18 '주거실태조사' 기초자료 이제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 19 우리나라, 공간정보 분야 신흥 주도국으로 발돋움
- 20 10월 공공시설물 대상 디자인 축제 열린다
- 20 국토교통부 통계정보가 한눈에 '썹'
- 21 북한 지도, 이제 내 손안에 있다
- 21 세계적 권위 베를린 갤러리에 서울 공공건축 6선 걸린다

녹색건축·도시 부문

- 23 '정부와 업체가 함께' 해외건설 신 시장 개척
- 23 대전시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발전 시설 보급
- 24 한국 '건설사업관리제도' 캄보디아서 통했다!
- 24 홍천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 25 서울시, '옥상도 에너지다, 옥상햇빛 캠페인' 열어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26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손쉽게 고쳐!
- 26 안전사고 없는 건설업체, 입찰에서 우대한다!
- 27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방식 확 바뀐다
- 27 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된다
- 28 11월부터 건축물 등에 '안전·범죄예방 기준' 의무 적용

29	종합병원 부지에 일반병원, 요양병원 설치 허용된다
30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 간소화, 임대주택용지 탄력적 공급 허용
30	100년 묵은 지적도 디지털화 땅 분쟁 해소 기여
31	세종시로 오세요~ 입주 대학·병원에 건축비 25% 지원
32	울산시, '수치지형도 갱신'으로 안전한 창조도시 관리
32	전북도 주택개량사업 1조 193억 원 투입 농어가 혜택 지속 확대
33	대전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위해 힘 모은다
33	부산시 도시재생 선도 지역 사업추진협의회 출범
34	서울시, 홍은동에 '청년 공공주택 협동조합' 첫 선
35	대전시, 건설 분야 '안전한 대전' 행보 눈길
35	강화 선두마을 디자인 공모전 개최
36	서울시·자치구 1,000명 규모 생활권계획 참여단 모집
<hr/>	
해외건축정책동향	38 노르웨이 건축정책(2009)
<hr/>	
APU Story 열한 번째	50 한양도성박물관

이달의 정책 Highlights

건축문화 부문

2014년 8월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 외 4개 중앙부처와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21건의 사업 및 시책이 발표되었다.

건축상 시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시는 '올해,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수상자 탄생', '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요, 「시민공감건축상」', '2014년 서울시 건축상 대상에 윤동주문학관' 등의 행사 소식을 알렸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충청남도도는 '국토부, 공간정보 분야 국제 컨퍼런스 IC-GIS 개최', '우리나라, 공간정보 분야 신흥 주도국으로 발돋움', '국토교통부 통계정보 한눈에 쏙', '10월 공공시설물 대상 디자인 축제 열린다' 등 공간정보와 관련한 행사 및 사업추진 계획을 전했다. 서울특별시시는 '세계적 권위 베를린 갤러리에서 서울 공공건축 6선 걸린다' 등 서울시 공공건축 관련 소식을 알렸다.

녹색건축도시 부문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강원도에서 총 5건의 사업 및 시책이 발표되었으며, '대전시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발전 시설 보급', '홍천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 옥상도 에너지다, 「옥상햇빛 캠페인」 열어' 등 녹색건축·도시 개발과 관련한 정책사업이 발표되었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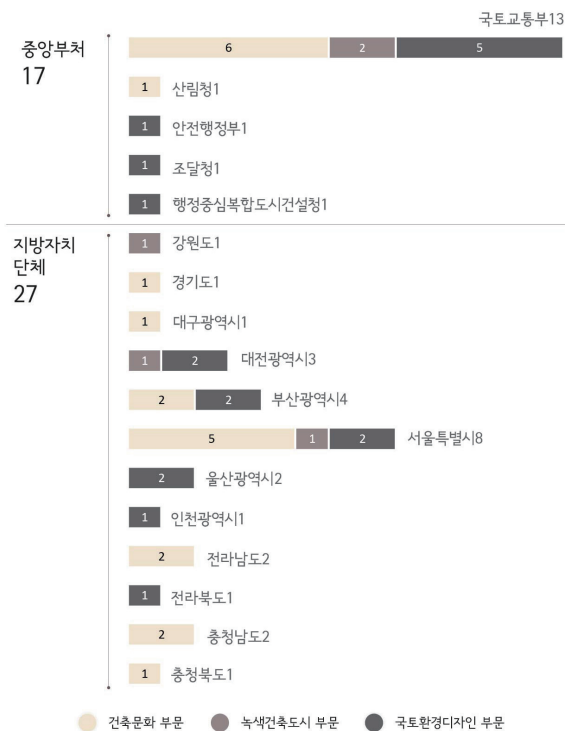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서는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서울시를 비롯한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5건의 사업 및 시책이 발표되었다.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는 '11월부터 건축물 등에 「안전·범죄예방 기준」 의무 적용', '안전사고 없는 건설업체, 입찰에서 우대한다', '울산시, 「수치지형도 갱신」으로 안전한 창조도시 관리', '대전시, 건설 분야 「안전한 대전」 행보 눈길' 등 건축·도시 안전과 관련한 정책 사업을 알렸다.

또한,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방식 확보한다', '대전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위해 힘 모은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 간소화, 임대주택용지 탄력적 공급 허용', '정부와 업체가 함께 해외건설 시장 건설' 등 건설산업 육성정책 관련 사업 및 시책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2014년 8월, 중앙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건축·도시 관련 주요 시책 및 사업 관련 발표자료는 총 44건이며, 이 중 중앙부처의 발표 자료는 17건(38.6%),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발표자료는 27건(61.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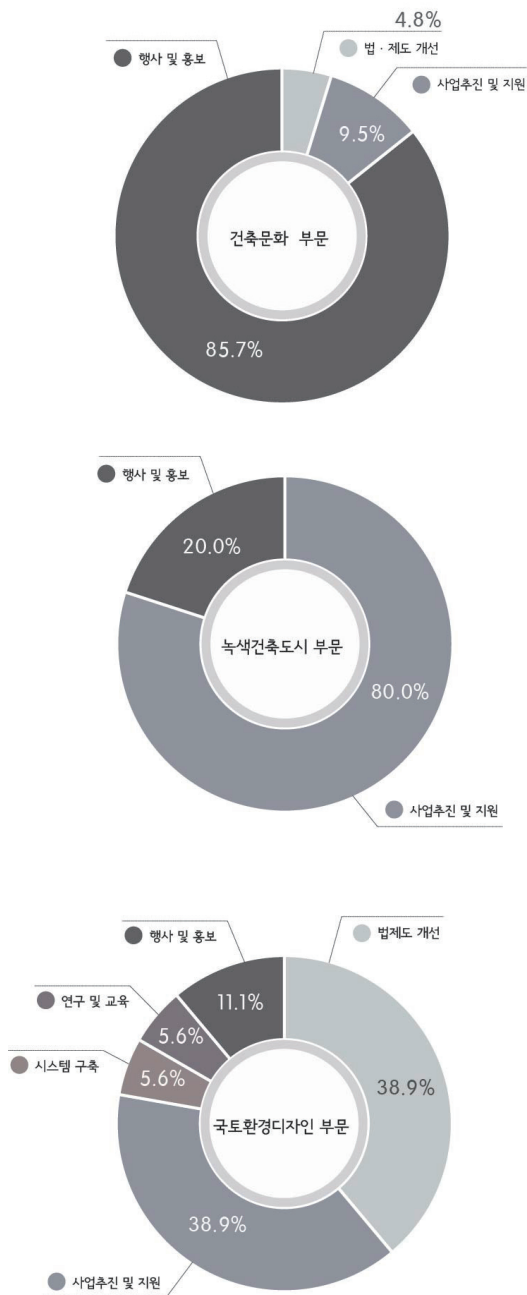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외 3개 중앙부처에서 발표한 자료 17건(38.6%) 중 가장 중점적으로 발표된 부문은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으로, 국토교통부 5건(11.4%), 안전행정부,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각 1건(2.3%)씩 총 8건(18.2%)의 정책사업을 발표했다.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 6건(13.6%), 산림청 1건(2.3%)으로 총 7건의 정책사업을 발표했으며,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가 2건(4.5%)의 정책사업을 발표하였다.

총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자료 27건(61.4%) 중 14건(31.8%)은 「건축문화 부문」으로 서울특별시 외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부문과 관련한 정책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서는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에서 10건(22.7%)의 정책사업을 발표했으며,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강원도와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에서 각 1건(2.3%)의 사업 및 시책을 발표했다.

주관부처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도시 부문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부문별 합계
국토교통부	6(13.6%)	2(4.5%)	5(11.4%)	13(29.5%)
산림청	1(2.3%)	—	—	1(2.3%)
안전행정부	—	—	1(2.3%)	1(2.3%)
조달청	—	—	1(2.3%)	1(2.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1(2.3%)	1(2.3%)
합계 (중앙부처)	7(15.9%)	2(4.5%)	8(18.2%)	17(38.6%)
강원도	—	1(2.3%)	—	1(2.3%)
경기도	1(2.3%)	—	—	1(2.3%)
대구광역시	1(2.3%)	—	—	1(2.3%)
대전광역시	—	1(2.3%)	2(4.5%)	3(6.8%)
부산광역시	2(4.5%)	—	2(4.5%)	4(9.1%)
서울특별시	5(11.4%)	1(2.3%)	2(4.5%)	8(18.2%)
울산광역시	—	—	2(4.5%)	2(4.5%)
인천광역시	—	—	1(2.3%)	1(2.3%)
전라남도	2(4.5%)	—	—	2(4.5%)
전라북도	—	—	1(2.3%)	1(2.3%)
충청남도	2(4.5%)	—	—	2(4.5%)
충청북도	1(2.3%)	—	—	1(2.3%)
합계 (지방자치단체)	14(31.8%)	3(6.8%)	10(22.7%)	27(61.4%)
총 계	21(47.7%)	5(11.4%)	18(40.9%)	44(100.0%)

■ 주관부처별 정책동향



7월 발표자료 중 가장 중점적으로 발표된 부문은 전체 47건 중 21건(47.7%)에 해당하는 「건축문화 부문」이며, 세부분야별로는 ‘행사 및 홍보’ 분야에서 18건(40.9%),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에서 2건(4.5%), ‘법·제도 개선’ 분야에서 1건(2.3%)의 정책사업이 발표된 것으로 정리된다.

총 18건(40.9%)의 정책사업이 발표된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서는 ‘법·제도 개선’,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에서 각 7건(15.9%), ‘행사 및 홍보’ 분야에서 2건(4.5%), 「시스템 구축’ 분야와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각 1건(2.3%),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총 5건의 정책사업이 발표되었고,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에서 4건(9.1%), ‘행사 및 홍보’ 분야에서 1건(2.3%)의 정책사업이 발표된 것으로 정리된다.

이번 달에는 ‘행사 및 홍보’ 분야의 사업 및 시책이 21건(47.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사업추진 및 지원’분야 13건(29.5%), ‘법·제도 개선’ 분야 8건(18.2%), ‘시스템 구축’ 분야 및 ‘연구 및 교육’ 분야 각 1건(2.3%)의 순으로 정리된다.

세부 분야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 도시부문	국토환경 디자인부문	분야별 합계
계획수립	—	—	—	—
법·제도 개선	1(2.3%)	—	7(15.9%)	8(18.2%)
사업추진 및 지원	2(4.5%)	4(9.1%)	7(15.9%)	13(29.5%)
시스템 구축	—	—	1(2.3%)	1(2.3%)
연구 및 교육	—	—	1(2.3%)	1(2.3%)
행사 및 홍보	18(40.9%)	1(2.3%)	2(4.5%)	21(47.7%)
총 합계	21(47.7%)	5(11.4%)	18(40.9%)	44(100.0%)

■ 세부분야별 정책동향

디자인 우수 공공시설물 인증·수상제 시행

전남도,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위해...
선정 제품 인증마크 사용·전시 홍보

2014.08.27. 전라남도 대변인실

전라남도는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 녹색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5번째로 개최되는 녹색디자인 인증제는 기존 디자인과 실용성이 우수한 도로 부속 시설물, 가로 시설물, 편의 시설물 등 공공 시설물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도로, 광장, 공원, 건축물 등 공공공간이 우수하게 조성된 시군을 표창하는 '수상제' 신설로 공공분야 우수 공간 조성을 장려하고 이용자인 도민 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인증 제품 중 인증 기간이 만료된 제품을 대상으로 재인증을 시행해 우수한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전남도 녹색디자인 인증제품으로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신청은 '디자인 인증제'와 '수상제' 2개 부분으로 오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전남도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접수된 제품과 공간은 전남도 가이드라인 적합성, 경제성, 편의성,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류심사를 거쳐 각각 2차 현물, 현장 심사를 통해 인증·수상작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제품은 3년간 전남도 녹색디자인 인증마크를 각종 홍보물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전남도에서는 홍보책자 제작 및 배부,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시 녹색디자인 인증 제품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고, 전시 참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올해 선정된 우수 작품 전시회는 오는 11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습지센터에서 개최되며, '2014년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지사회의 주제로 선정된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라는 주제에 맞춰 경관디자인 향상에 기여한 성과물의 통합전시회로 개최해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박수옥 전남도 경관디자인과장은 "공공시설물과 공공공간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우수한 제품과 공간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이번 전시는 2016. 세계 친환경디자인박람회 개최에 앞서 관람객들에게 전남의 다양한 경관·디자인 시책과 다채로운 볼거리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 공공디자인서포터즈 지역을 위한 디자인 활동 펼쳐

2014.08.18. 충청북도 공보관

충청북도가 디자인을 통해 지역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재능기부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포터즈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톡톡히 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건국대(지도교수 윤명한), 청주대(지도교수 김동하) 학생들로 구성된 총 13팀 44명의 '공공디자인 서포터즈'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디자인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들은 설문조사, 빅 데이터 분석, 국내·외 우수사례 연구, 디자인 아이디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디자인'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윤명한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찾아내 조사, 기획, 아이디어, 디자인 개발까지 제안하는 실무 체험형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능력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 지역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디자인이 접목되어야한다"고 전했다.

특히 서포터즈가 참여하여 제안한 '제천 칠성 근린공원 프로젝트', '제천 중앙시장 환경 디자인'을 접한 제천시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이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스토리텔링 하여 연계상품까지

디자인 제안을 해 놀랐다.”면서 “작은 디자인 하나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 등 디자인의 필요성과 효과를 절실히 느꼈다”고 전하면서, 이어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한 사업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사업을 추진 중인 충북도 고규식 건축문화과장은 “우리의 삶터는 우리가 디자인하고 가꿔나가야 한다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면서 “이 사업을 계기로 도민 스스로 내가 사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포터즈 활동 결과보고회는 오는 11월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서포터즈들의 꿈과 맘으로 일구어낸 단양군 도담삼봉 경관디자인, 태양광활용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동주택 외벽색채디자인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의 결과가 발표된다.

전남도, 경관 아름답고 쾌적한 도민 공간 창조

28일 진도서 도·시군 좋은 경관 만들기 추진단 워크숍

2014.08.28. 전라남도 대변인실

전라남도는 경관 담당 공무원의 경관 전문성 함양 및 마인드 제고를 위한 ‘2014년 좋은경관만들기추진단 워크숍’을 28일 진도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관계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14년 좋은경관만들기추진단 활동상황 보고, 경관사업추진 우수시군 사례발표, 2014년 대한민국 경관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의 ‘현풍느티나무 테마휴게소 사업’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 등 경관이 아름답고 쾌적한 전남 실현을 위한 강의가 이어졌다.

또한 워크숍 이후 진도군 일원의 녹색 디자인 시범거리 현장 견학과 특산물 전시장 방문·구매 등을 통해 세월호 사고 수습에 따른 진도 살리기에 전남도청과 22개 시·군 공직자로 구성된 ‘좋은

경관만들기추진단’도 한마음으로 동참했다.

전남도는 2010년 도청 직원 21명을 시작으로 상시 활동이 가능한 경관점검팀을 구성하고 도와 시군을 합해 총 401명으로 구성된 현재의 ‘좋은경관만들기추진단’을 2012년부터 확대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기존 공무원만으로 운영되던 좋은경관만들기추진단에 앞으로 도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거버넌스를 구축, 소통과 참여를 통해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매력적인 전남의 경관 만들기 정책을 실현해나갈 방침이다.

박수옥 전남도 경관디자인과장은 “좋은경관만들기추진단의 활동 하나하나가 전남 경관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남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창출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지역 고유의 특화된 경관 발굴로 이어지고 관광 명소화돼 도민의 소득 증가와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요, ‘시민공감건축상’

18작품 중 상위 8작품에 대해 시민투표 실시해

‘시민공감건축상’ 선정

2014.08.01.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서울시는 ‘제3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1차(서류)심사 결과 주거부문 3작품, 비주거부문 9작품, 건축전문 리모델링부문 6작품 등 총 18작품을 선정하고 상위 8작품에 대해서 8.14.(목)까지 시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공감건축상’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해 시민투표를 진행하며, 시민투표는 2차 심사 대상 상위 8작품에 대하여 8.1.(금)~8.14.(목)의 2주간 ‘서울시 엠보팅’(mvoting.seoul.go.kr 및 모바일 어플)을 통해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가장 선호하는 1작품에 대해 투표 가능하다.

올해 32번째로 시상하는 서울시 건축상은 건축분야의 명실상부한 최고권위의 상으로서, 공공성이 탁월하고, 예술적 가치와 기술적 수준이 뛰어나 우리 시 건축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작품을 매년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 ‘서울시 건축상’은 도미니크 페로(프랑스 건축가), 승효상(이로재 건축), 광재환(건축그룹 칸) 등 유명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2차(발표), 3차(현장)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시는 제32회 서울시 건축상 선정을 위해 1차 서류심사를 진행했고, 상위 8작품에 대해서는 오는 8.12(화)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2차 (발표)심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2차 심사는 설계자의 작품의도 등 관련 설명과 발표를 통해 심사하며, 건축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관할 수 있어, 깊이 있고 투명한 심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위원회 심사와 별도로 시상하는 시민공감건축상은 건축물의 사용자인 시민이 직접 투표한 결과만으로 선정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건축전문가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건축상 시상식은 10.20(월)에, 수상작품 전시는 10.20.(월)~26.(일)에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서울시 건축상을 통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건축물을 많이 발굴하겠다.”며, “서울시 건축상과 서울건축문화제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건축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 조은사랑채, 가회동 성당, 서울대IBK커뮤니케이션센터, 아름지기, 한남동PROJECT, AIA타워, 라파엘센터, 윤동주 문학관



2014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부산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셉테드(CPTED)
사업 발굴을 위해 ‘2014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2014.08.08. 부산광역시 도시경관과

부산시는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창의적 유형의 우수한 공공디자인 발굴을 위해 ‘2014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2009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전은, 시민들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공디자인의 질적 수준도 향상시켜 부산의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주변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셉테드(범죄예방 환경디자인, CPTED) 제품 디자인 또는 시설물 개선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공모를 실시한다.

작품 접수기간은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는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완성된 작품 및 작품 파일 CD를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부산광역시청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공모전 담당자 앞)으로 접수하면 된다.¹

공모심사는 창의성, 활용성, 상징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시상은 2개 부분으로 나눠 실시된다.

대학 및 일반부는 대상 1명(500만 원), 금상 1명(300만 원), 은상 3명(각 100만 원), 동상 6명(각 50만 원)을 선정하고, 고등부는 최우수상 1명(문화상품권 30만 원), 우수상 2명(문화상품권 각 20만 원, 장려상 3명(문화상품권 각 10만 원)을 수여하며, 심사 결과는 9월 26일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공공디자인 중 적용 가능한 디자인은 부산시와 구·군 등 공공시설물 설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공모전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외 대학생들의 다국적 열린 아이디어를 받는다

2014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 18일부터 열려

2014.08.08. 부산광역시 건축주택담당관

부산시는 부산국제건축문화제 대표행사인 ‘부산국제건축디자인 워크숍’의 2014년 주제를 ‘구도심인 부산역광장과 신도심인 북항 재개발지역을 연계하는 건축적 아이디어’로 정하고, 부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도시재생 선도사업(도시경제기반형)’과 연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은 국내·외 세계 유명 대학의 젊은 건축학도가 모여 건축을 매개로 소통하며, 국제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부산국제건축문화제의 대표적인 국제행사로서, 부산의 특징지역을 계획지로 선정해 국내·외 학생들이 한 팀을 이뤄 일정 내 작품을 진행하며, 학생들만의 참신한 건축적 아이디어를 나눠왔다.

12회째를 맞는 올해 워크숍에는 일본 큐슈산업대, 중국 천진대, 베트남 하노이공대 등 국외 유명대학교를 비롯해, 국내 홍익대, 고려대, 부산대 등 총 8개국 25개 대학이 참가하며,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간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에서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중 도시재생사업을 가장 활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부산에서 역점적으로 시작한 ‘부산역 주변 국가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대해 팀별작업뿐만 아니라, 워크숍에 참여한 국내·외 학생과 튜터,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의 전문가, 시민단체, 관심 있는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열린토론회를 개최해 단순한 학술행사를 넘어 열린 세계도시, 소통의 도시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¹ 고등학생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와 작품파일 CD만 제출

상자로는 김현진 건축사(에스피엘케이 건축사 사무소)가 선정됐고,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은 윤태권 건축사와 노영자 건축사가 각각 최우수상 수상자로, 최종 8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신진건축사 대상의 심사는 대표 설계 작품의 완성도, 건축사로서의 창조적 역량 및 건축주·시공자와의 소통 능력 등에 주안점으로 두고 이루어졌다.

대상 수상자인 김현진 건축사(에스피엘케이 건축사사무소)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계는 물론 시공에 이르기까지 신진의 열정으로 최선을 다한 자세가 높게 평가 받았다.

김현진 건축사의 대표 작품인 '혼신지 집'은 연꽃으로 가득 찬 저수지(혼신지) 등 주변 자연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시도한 건축으로서, 인근에서 생산되는 청석으로 담을 조성해 건축물과 대지를 연계했으며, 방문, 창호, 홈통 등에서 볼 수 있는 탁월한 세부 디자인은 건축사의 진지한 노력을 드러내는 데 손색이 없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윤태권 건축사(엔진포스 건축사사무소)의 '양평패시브하우스'는 적은 유지비용을 목표로 하는 전형적인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기본요건에 충실하면서도, 사용자의 생활양식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채로운 공간디자인을 구현하였다.

또 다른 최우수상 수상자인 노영자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엘아이엠 : LIM)는 '케이 팩토리'에서 색상 및 질감에서 탄소를 연상시키는 내외부 마감재를 사용하여 건축주인 탄소소재 제품 공장의 개성을 충분히 담아냈으며, 건축물의 주요 위치에 회사 로고의 주조색인 붉은 색상을 적절히 강조한 점 등에서 건물 사용자에게 대한 이해와 배려가 돋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선정된 대상 및 최우수상(총 3점)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우수상(총 5점) 수상자에게는 대한건축사협회장상을 수여하며, 11월 중 관련 시상식을 비롯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는 수상자들에게 정부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 관련 심의·자문위원 위촉을 비롯하여, 경력과 대표작을 소개하는 작품집 제작,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및 국토교통부 주최 「신진건축사 설계·아이디어 공모전」 가산점 부여 등 다방면의 실질적 혜택을 적극 부여할 계획이다.



■ 대상작(혼신지 집)

2018 세계목조건축학술대회 서울 유치 성공 국립산림과학원, 2018 세계목조건축학술대회 서울 유치 성공

2014.08.20.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조건축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인 '세계목조건축학술대회(WCTE, World Conference on Timber Engineering) 2018'을 서울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WCTE는 40개국 800명 이상의 목조건축 전문가와 건축가,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로, 1988년 미국 시애틀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을 중심으로 조직된 유치단은 학술대회의 한국 유치를 위해 지난 9일부터 5일간 열린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WCTE 2014 대회에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2018년 세계목조건축학술대회(WCTE 2018)를 서울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WCTE 2018 개최국 선정은 지난 6월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고 2014년 WCTE 학술대회에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한 최종 심사로 이뤄졌으며, 이번 선정에는 한국, 중국, 터키, 호주 등의 유치단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WCTE 2018 유치단은 발표를 통해 한국 목조건축 및 목재산업의 우수한 기술과 시장 잠재력, 유치 도시(서울)와 장소(코엑스)의 장점, 주관 기관의 능력과 재정계획 등 유치 제안 이유를 피력했다.

WCTE 2018 개최국 선정 심사 결과, 한국은 그동안 WCTE에 기여한 바가 크고 한옥을 비롯한 목조문화가 국민 정서에 폭넓게 자리하고 있는 것에 큰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피겨·쇼트트랙 경기장인 '경포아이스아레나'가 대형 목조건축물로 시공되는 등 향후 목조건축의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대회 슬로건을 '다시, 목조문화의 황금시대 (Again, Golden Era of Timber)'로 정하고, 2018 WCTE 학술위원회와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한국목재공학회와 서울대학교, 대한건축학회, 산업계 등 여러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운영균 원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쇼트트랙 경기장이 목조로 추진되는 등 목조건축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북미와 유럽 지역 등 목조건축 선진국의 선진 기술과 학문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유치 성공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치단으로 함께 참가한 서울대학교 이진제 교수는 "2018 세계목조건축학술대회는 목조건축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역과 세대간, 학문 분야 간 융복합의 장이 될 것이며, 특히 국내 목조건축분야의 발전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서울유치의 의미를 말했다.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부문과 건축 부문의 산·학·관·연 협업을 통해 WCTE 2018 서울 대회가 역대 최고 대회이자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14년 서울시 건축상 대상에 '운동주문학관'

서울시, '제32회 서울시 건축상' 대상 등 총 24작품 선정·발표

2014.08.20.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2014년 '서울시 건축상' 영예의 대상은 운동주 문학관(이소진, 아플리에 리옹 서울)이 선정됐다.

운동주 문학관(종로구 창의문로 119, 연면적 188㎡)은 버려진 물탱크와 가압장 시설을 리모델링해 지난 '12년 7월 문을 열었다.

이번 심사에서 기존의 공간적 특성을 활용하면서도 열림과 닫힘, 옛것과 새것, 빛과 공간이라는 건축의 기본 명제를 정교하게 재구성한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또한, 현장심사에서 시공의 완성도가 우수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시공사 현장대리인 이주홍 씨(재선엔지니어링)가 우수상(건축명장)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 건축상에 도입된 시민이 직접 뽑는 '시민공감 건축상'에는 총 3,239표 중 1,283표(40%)를 얻은 '가회동 성당(우대성, 건축사사무소 오피스)'이 선정되었다.

'시민공감 건축상' 투표는 2차 심사 대상 8작품을 놓고 지난 8월 1일~14일 엠보팅(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됐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와 별도로 건축물의 실제 사용자인 시민이 직접 주는 상이라 의미가 크다.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한 '서울시 건축상'은 공공기여도가 탁월하고 예술적 가치와 기술적 수준이 뛰어나 서울의 건축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작품에게 수여되는 명실상부 서울시 건축 분야 최고 권

위의 상으로,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시 소재 건축물이 대상이다.

①일반부문 △대상 1작품 △최우수상 3작품 △우수상 15작품 ②추천부문 올해의 건축가상 1인 ③대학생 부문 △최우수상 1작품 △우수상 3작품 등 총 24작품을 선정·발표했으며, 일반부문 최우수상은 가회동 성당(우대성, 건축사사무소 오피스), 아름답기(정일교, 건축사사무소 엠에이알유), 라파엘센터(김승희, 경영위치 건축사사무소) 세 작품이 선정됐다.

추천부문 ‘올해의 건축가상’에는 조성룡(조성룡 도시건축 대표) 건축가가 선정되었으며, 조성룡 건축가는 다수의 건축계획 및 작품을 통해 서울시 건축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은 ‘응답하라 서울광장 2014’(강석오, 윤중연, 최규석, 최윤미, 튜터 강정은)이 수상했다.

‘2014 서울시 건축상’ 시상식은 ‘2014 서울건축문화제’ 행사의 하나로 오는 10월 20일(월)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며, 수상작 전시는 10월 20일(월)~10월 26일(일) 신청사 1층 로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서울시 건축상을 통해 건축문화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우수한 건축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 건축상과 10월에 열리는 서울건축문화제를 통해 사람이 살기 좋고,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좋은 건축에 대해 생각해 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경쟁력 강화 모색... 도시정책포럼 개최

도시경쟁력 강화 위한 창조도시 육성 및
안전신도시 조성 방안 논의

2014.08.20. 경기도 도시기획과

경기도가 급변하는 도시정책 패러다임에 대응해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도는 21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경기도 도시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에는 GRI 이상대 박사, 토지주택연구원 김남정 박사 등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를 비롯해 시군 도시정책·도시재생 및 신도시개발 부서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창조도시 육성’과 ‘안전 신도시 조성’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먼저 ‘창조도시 육성’을 주제로 고령화, 산업 노후화 등으로 인한 지역성장 저하 및 도시경쟁력 쇠퇴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 신도시 조성’을 주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안전 도시’를 조성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상대 박사는 기초발제를 통해 “고령화 및 도시·산업 노후화 시대에는 전통 방식의 도시성장 모델과 생산인구 투입확대 방식의 성장정책에 한계가 있다.”며 “도시경쟁력 저하를 탈피하기 위해 창조산업과 창조도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도심형 창조산업을 육성하고 창조계층의 거주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종전 부지, 공장 이전지 등에 창조산업을 유치하고 입주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조했다.

김남정 박사는 “도시안전은 그동안 투자 대비 가시적인 효과 유발에 한계가 있어 등한시 되어 왔으나, 최근 사회적 재난이 급증하는 추세이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도시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생활 곳곳에서 실천 가능한 방재사업 추진, 신도시 내 장소별·시설별 안전지도를 사전에 작성하여 주민과 공유할 것 등을 실천 방안으로 제안했다.

기조발제 후에는 대진대학교 최주영 교수를 좌장으로 전상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토론을 진행하며, 아울러 경기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들도 정책 실현방안, 정책 도입에 필요한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유영봉 경기도 융복합도시정책관은 “급변하는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창조적인 정책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며 “기초발제 내용과 전문가 토론 결과를 향후 경기도 도시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건축정책에 도민 뜻 담는다

22일 아산시 '도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공청회

2014.08.20.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충남도는 22일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충청남도 건축 관련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갖고 도민과 건축 관련 전문가, 15개 시·군 담당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충청남도 건축 관련 기본계획(안)은 광역건축기본계획과 녹색건축물조성계획을 통합한 것으로, 오는 10월을 목표로 수립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광역건축기본계획은 도민 삶의 질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건축정책의 방향을 담은 계획이며, 녹색건축물조성계획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도민 복리를 향상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다.

이들 두 계획 모두 국가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두 가지 계획을 통합해 수립하는 사례는 충남도가 유일하며, 상호계획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도는 시·군 관련 실무자 워크숍, 전문가 TF회의, 별도 자문회의, 충남 건축사회 공청회, 도 건축위원회 및 정책자문위원

회 자문 등을 통해 건축 관련 기본계획 비전을 '창조적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행복한 삶터, 충남'으로 설정했다.

이외에도 도는 건축 관련 기본계획 비전을 실현할 3대 목표 및 9개 추진전략과 함께 20개 실천과제를 제안하고 이 가운데서도 가장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추려 6개 핵심전략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6개 핵심전략과제는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위한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충남 행복가꿈센터 설립 및 운영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및 건축투어프로그램 개발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재생방안 마련 △지역 맞춤형 녹색건축물 기준 마련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초건축교육 확대 등이다.

이번 공청회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3대 목표와 9개 추진전략, 20개 실천과제 등에 대한 도민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학·협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청취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도 건축 관련 기본계획(안)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군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관련계획 세부사업을 내실화 할 것”이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10월 최종 발표 전까지 최대한 반영해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감 있는 우리 마을' 직접 디자인해 봐요!

제6회 주민참여 도시학교... 9월 5일까지 참여자 접수

2014.08.2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대구시와 대구경북연구원은 주민들이 스스로 도시디자인 수업을 통해 마을의 현안 발굴과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디자인 분야의 주민자치 모델인 '제6회 주민참여 도시학교'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도시학교는 지역의 문제를 마을 주민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 리더를 양성하고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실습 중심의 스튜디오형 학습 프로그램으로서, 9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8시간씩 진행하며,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수강료는 무료다.

참여 방법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9월 5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참가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경북연구원 홈페이지(www.dg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학교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대구광역시(053-803-5524)나 대구경북연구원(053-770-50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강생으로 참여한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마을에 대한 문제와 현안을 직접 분석하고, 도시디자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살고 싶은 마을의 모습을 마스터플랜 형태로 직접 작성해 보는 체험의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이번 도시학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4년도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최종 결과물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거치게 되며, 선정된 우수작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등 공모사업 참여와 각종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4 한양도성문화제 '마을에서 인문(人文)을 묻다'

성곽마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날 수 있도록
강연, 토론, 마을답사로 구성

2014.08.24,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서울시는 2014 한양도성문화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을에서 인문(人文)을 묻다」를 8월 23일부터 총5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10:00~12:00), (14:00~16:00)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을에서 인문(人文)을 묻다」프로그램은 한양도성 주변 마을에서 실시되며 강연, 토론, 마을답사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으로, 총 5회 차, 각 회 차별 2회로 실시되며 한양도성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

■ 프로그램 내용

구분	주제	대상 마을	장소
1회 차(8.23.)	마을과 역사	부암동, 교남동	부암동 주민센터
2회 차(8.30.)	마을과 예술	북정마을	성북도원
3회 차(9.6.)	마을과 사람	창신동	창신동 주민센터
4회 차(9.13.)	마을과 공간	장수마을	한성대학교
5회 차(9.20.)	마을과 미래	한양도성 성곽마을	한양도성박물관

※ 10:00~12:00, 14:00~16:00 으로 2회씩 진행되며 각2시간 정도소요

한양도성 성곽마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마을과 사람, 도시의 성장과 공생'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다.

「마을에서 인문(人文)을 묻다」는 근대 한양도성 내외부에서 일어나는 지역재생과 삶의 문제에 집중하여, 마을과 공간, 마을과 예술, 마을과 사람, 마을과 역사, 마을과 미래 등 5가지 대 주제로 나누고, 실제 한양도성 내·외부의 마을과 삶터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과 함께 삶터 혹은 일터로서의 마을과 지역재생의 지속 가능성 등 고민을 나누고, 수강자들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자유로운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사전프로그램 기획과 실행 단계부터 전문 일러스트레이터가 참여하여 한양도성과 성곽마을 주변, 도성길과 마을 주민들을 일러스트로 담아내는 작업도 병행하여, 완성된 작품들은 도성문화제 기간 동안에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10월에는 장수마을 박물관에서 "서울 한양도성길 인문학 일러스트 전시회"도 개최한다.

신청은 이메일과 전화로 실시하며, 참가비용은 무료, 접수는 이메일 접수 tpdus9729@gmail.com, 전화접수 070-8644-8289를 통해 이루어지며, 매회 각 타임 당 5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프로그



램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한양도성도감(2133-2657), 한양도성문화제 사무국(070-8644-8289)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한양도성, 마을에서 인문(人文)을 묻다' 포스터 일부

국토부, 공간정보 분야 국제컨퍼런스 IC-GIS 개최 8월 26일, '공간 빅데이터'를 주제로 첨단기술과 활용사례 발표

2014.08.25.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공간정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간정보분야 최신 이슈를 진단하고 학술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정보 국제컨퍼런스(IC-GIS)」를 8월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4 스마트국토엑스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미래 사회를 향한 빅데이터 기술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간 빅데이터’에 대한 학계와 공간정보 산업계의 교류의 장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컨퍼런스는 공간정보 분야 글로벌 기업인 에스리(ESRI) 레오나르드 제이아 모한 아시아 총괄이사의 기조강연과 ‘정부 3.0 시대의 공간 빅데이터’, ‘공간 빅데이터 기술’, ‘공간 빅데이터 활용사례’, ‘패널토론’ 등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주목할 만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조강연에서는 미국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기업이 시민과 고객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공간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보여 줄 예정이며, 제2세션에서는 공간하둡(SpatialHadoop)을 개발한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모하메드 모크벨(Mohamed, F. Mokbel) 교수가 공간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산처리 플랫폼인 공간하둡의 개발과정 및 분산처리 기술구조에 대하여 소개한다.

제3세션에서는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부드헨드라 바두리(Budhendra Bhaduri) 연구위원의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관리 사례’ 공유, 일본 동경대 유키 아키야마(Yuki Akiyama) 연구원의 ‘스마트폰을 통해 생성되는 시공간적인 Micro Geo Data(MGD) 분석’에 대한 일본의 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서울대, 국토연구원, 한국오라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내 전문가들의 최근 공간빅데이터 기술개발 및 활용 활동에 대한 다양한 발표도 준비되어 있다.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국제컨퍼런스에서 ‘공간 빅데이터’의 첨단기술과 활용사례가 공유되면,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공간정보 기업 관계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실태조사’ 기초자료 이제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국토부 ‘주거누리’에서 신청, 간편하게 내려 받아 볼 수 있어

2014.08.25.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의 최종 결과물을 8월 26일부터 기초자료(마이크로데이터) 형태로 일반인에게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주거실태조사 개요

- 조사명: 주거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631호)
- 통계의 종류: 조사통계(표본조사)
- 조사방법: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법」
- 조사항목: 주택특성, 주거비, 이사경험, 주거만족도, 주거가치관 등
- 조사결과 공개: 주거누리(www.hnuri.go.kr)

그간 주거실태조사 기초자료는 지자체와 연구기관에 대해서만 제공되었으며 보안각서를 작성해야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부동산통계협의회(국토부 주관)에서 건의된 통계 기초자료 공개에 대한 요청을 반영하고 정부 3.0 계획에 따라 일반인도 다양한 분야에 주거실태조사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용절차도 단순화하여, 누구나 별도의 보안각서 없이 '주거누리'에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국토교통부 주거누리 홈페이지(www.hnuri.go.kr)에 접속하여 '기초자료(마이크로데이터)' 코너에서 자료 신청을 요청하면 '신청결과 확인' 코너에서 1일 이내에 신청자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일반국민이나 연구기관이 관심분야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주거 관련 통계자료 및 연구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공간정보 분야 신흥 주도국으로 발돋움 세계 21개국 고위급 인사(장·차관 등) 참여, 공간정보 분야 인력양성과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마련

2014.08.27.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국토교통부는 「2014스마트국토엑스포」 기간 중(8.25.~27.)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우즈베크, 터키, 우루과이 등 세계 21개국의 공간정보 분야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고위급(장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고위급(장관) 회의」는 8월 26일에는 사전 실무회의와 국가별 정책발표회와 해외 정부대표단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공간정보 기업의 기술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 8월 27일에는 고위급 본회의가 열려 공간정보 분야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진다.

우선 8월 26일 열린 「기술설명회」와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다인디지컬쳐, 지오씨엔아이 등 4개 국내 공간정보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지적공사가 해외 정부대표단을 대상으로 국내 공간정보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해외 대표단에게 소개함으로써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기술설명회에서는 국내 3D scanning 분야의 선두 기업인 '다인디지컬쳐'가 3차원 실내공간정보 모델링 기술로 노후한 공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프레젠테이션하고, LH공사는 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해외 신도시 개발 경험과 맞춤형 신도시 개발을 제안하여 참석한 해외대표단의 좋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8월 27일 열린 고위급 본회의에서는 8월 26일 개최되는 사전 실무회의에서 마련된 '공간정보 분야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안)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금년 논의하여 채택하게 될 선언문에서는 2013년에 이어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상호 공감하고, 전문지식을 공



■ 국토교통부 주거누리 홈페이지



유하는 실천 방안을 구체화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교육자료 공유, 초청연수 프로그램 활성화, 채택된 선언문의 이행과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신설 등이 명시되었다.

더불어, 스리랑카, 우즈베크 등 해외 참석국과의 양자회담에서는 국내 공간정보 전문가 파견,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지원 등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연이은 고위급 회의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인지도를 통해 우리나라가 공간정보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이끌어가는 선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해외 시장을 두드리는 국내 공간정보 기업들도 좋은 성과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0월 공공시설물 대상 디자인 축제 열린다

제5회 충남도 디자인 인증제... 10월 6~8일 참여 작품 접수

2014.08.27.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충남도는 우수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개발을 장려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디자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오는 10월 ‘제5회 충남도 디자인 인증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디자인 인증제는 도시의 개성과 조화를 이뤄내는 공공디자인을 발굴하고 가치 있는 디자인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신청자격, 신청대상에 대한 공고를 실시하고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디자인 인증제에 참여할 작품을 접수에 나서며, 이후 참가작품을 대상으로 사용성, 창의·심미성 및 환경 친화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심사해 10월 15일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최종 심사결과 인증서는 11월 6일 건축·공공디자인 문화제에서 수여되며, 우수작품은 이날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전시된다.

도는 이번 디자인 인증제에서 우수 공공시설물디자인으로 선정된 제품은 3년간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인증제 출품작 중 우수 디자인에 미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우수 공공디자인 제품이 공공영역에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 저변확대에 노력할 것”이라면서 “신청 절차 및 선정기준 등 공고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통계정보가 한눈에 ‘썹’

국토교통통계누리를 사용자 중심의 기능으로 새 단장

2014.08.28. 국토교통부 정보화통계담당관

국토교통부는 이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원하는 통계를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통계포털(국토교통통계누리)을 새롭게 단장하여 9월 1일부터 서비스한다.

방문자 수 연 14만 명 이상인 국토교통통계누리는 국토, 주택, 토지, 수자원, 도로, 교통, 항공, 철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92종의 국토교통부 관련 통계를 한 곳에 모아 서비스하는 공간으로, 이번 개편에서는 통계자료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고, 주요화면은 최신 트렌드에 맞춰 디자인을 단순화하였다.

국토·도시, 주택·토지 등 7개 분야를 주요화면 중앙에 배치하여 원하는 통계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접근경로를 단순화하여 한 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통계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기능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국토교통통계포털에 사용자가 제안한 의

견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사용자와 더욱 가깝게 소통하고, 국토교통부 소관 통계활용 자료 등을 소개하는 코너를 신설하는 등 포털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통계누리 변경 후 메인화면

북한 지도, 이제 내 손안에 있다

북한 전 지역 지도 8.29.부터 다음[Daum]에서 공개

2014.08.29.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

정부에서 공개한 북한지도가 민·관 협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용 지도로 만들어졌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북한 전 지역의 지도(위성지도, 수치지도 등)를 다음 사이트(www.daum.net)를 통해 '14년 8월 29일부터 일반에게 무료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 3월 일반에게 공개했던 북한 지도 데이터에 다음지도를 적용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으로, 북한의 행정구역 및 지

명, 주요 산의 위치, 건물, 철도 등의 시설물 위치 정보가 상세히 드러나며, 주요 도로는 물론 면과 리 사이의 도로 정보까지 위성지도와 전자지도 형태로 피시(PC), 모바일 웹, 앱으로 공개된다.

사용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07~'09년 제작한 1/25,000 및 1/50,000 축척으로 그간 대북 관련 국가기관에만 제공되던 자료를 올해 일반에 공개(14.3.28.) 하면서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했다.

원본 자료가 필요한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구매할 수 있으며, 자료는 지형도(3,100원/장당), 위성지도(0.02원/kbyte, 북한 전역 약150만 원), 수치지도(17,500원/장당), 북한지도집(홈페이지 무상제공) 등이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민·관 협업을 통해 북한 지도 데이터 사용이 한층 편리해졌으며, 민간기업의 대북 경제 협력과 통일 연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북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수정·갱신하여 국민에게 최신의 북한 국토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통일에 대비해 북한의 주요 도심지역까지 확대한 상세지도(1/5,000 축척 등)를 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계적 권위 베를린 갤러리에 서울 공공건축 6선 걸린다

베를린 에데스 갤러리, '재생·사람' 주제

서울 공공건축 프로젝트 전시

2014.08.31.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건축전문 갤러리로는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독일 베를린 에데스 갤러리에 백사마을 주거지, 마포석유비축기지 등 '재생', '사람'을 주제로 한 서울 공공건축 프로젝트 6선이 소개된다.

6가지는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한양도성 복원'프로젝트와, 산업화 시대의 유물인 △세운상가 △용산미군기지 △마포석유비축기지 등의 창의적 재생프로젝트, 주민



의 커뮤니티와 삶의 흔적을 보존하는 △‘백사마을 주거지’ 재생 프로젝트,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은평 기자촌’ 친환경 주거단지이며, 판넬 18점, 모형 4점, 디지털액자 6점 등 총 28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베를린 에데스 건축 갤러리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서울시는 지난 3월 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승효상)를 개최해 서울시 공공건축가인 임재용 건축가를 큐레이터로 임명,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선정해 준비해왔다. 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건설의 도시에서 사람 중심의 ‘건축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민선5기부터 추진해온 건축·도시 관련 대표적 사업들을 선보여 성장과 팽창의 메트로폴리스가 아닌 재생과 상생을 모색하는 메타시티 서울을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8월 29일 18시 30분(현지시각, 서울 8월 30일 새벽 1시 30분), 베를린 에데스 건축 갤러리에서 개막식 행사를 가졌다. 개막 행사엔 정효성 서울시 부시장, 승효상 서울시 건축정책위원장, 윤종석 주독 문화원원장, 안드레아스 가이젤 (Andreas Geisel) 리히텐베르크 구청장 및 한국·독일 건축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 앞서선 한국과 독일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가들이 모여 ‘재생과 상생을 모색하는 메타시티’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열었으며, 한양도성 복원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송인호 교수의 발제와 질의·응답, 그리고 재생과 상생을 모색하는 메타시티를 향한 양국 건축가들의 경험과 향후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효성 서울시 부시장은 “서울 건축문화의 우수성을 현대 건축의 본토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2017년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건축대회에 앞서 유럽 건축가들에게 서울과 서울의 건축을 홍보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시회 이미지(한양도성, 백사마을, 마포석유비축기지, 세운상가, 기자촌, 용산공원)



**‘정부와 업체가 함께’ 해외건설 신 시장 개척****‘14년 하반기 시장개척자금 추가지원 실시**

2014.08.04.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하반기 시장개척자금 약 12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 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조사, 현지교섭, 발주처 초청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03~'13년) 총 674건(698개 사)의 사업에 22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202배의 수주성과(45.4억 불)를 거두었다.

올해 상반기 1차 지원 시, 84개사(74건, 약 35억 원)를 지원하였으며, 업체들의 적극적인 추가지원 요구에 따라,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하반기 2차 지원을 추진한다.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 원 이내이며(타당성 조사의 경우 3억 원 이내), 지원비율⁴은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90%이내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해외시장개척 2차 지원이 경쟁력과 가능성을 가진 많은 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면서, 관심 있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대전시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발전 시설 보급**공동주택 250가구에 설치비 약 50% 지원**

2014.08.03. 대전광역시 경제정책과

공동주택 보급률이 60%가 넘는 대전시의 특성상 단독주택 위주의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에 더 나아가 공동주택 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이용한 미니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을 추진한다.

미니태양광은 태양광 패널, 발코니 고정 장치, 소형 인버터 등으로 간단히 구성돼 설치 면적도 적고, 설치 이전도 쉽게 해체가 가능해 가전제품처럼 사용할 수 있어,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손쉽게 자가발전설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베란다 난간을 활용하는 초소형(200~300W) 발전설비 보급정책이다.

250W설치를 기준으로 월 약 3천원에서 1만원의 전기료가 절감되며, 이는 900리터 양문형냉장고 소비전력량 정도를 가동할 수 있는 전기 생산량이다.

지원대상은 약 250가구에 설치비는 250W가 70만 원 이하가 될 예정이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설치용량에 따라 설치비의 약 50% 정도인 가구당 32만 원에서 48만 원까지 지원하고, 설치 업체를 통해 5년간 무상 A/S 및 사후점검 서비스도 제공된다.

미니태양광은 태양광분야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선정(8.1.~8.8.) 하고, 남향 베란다를 가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유자나 세입자가 해당 자치구 에너지담당부서에 대전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을 하면 신청기간(8.14.~9.15.) 만료 후 5일 이내에 설치 여부를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아파트 베란다를 활용한 미니태양광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나,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며, 단독주택에는 2009년 68가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옥상·지붕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설비 425가구를 보급하였으며, 미니태양광과 별도로 단독주택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⁴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 대기업·공기업 30%(중소·중견 공동진출 시)

한국 '건설사업관리제도' 캄보디아서 통했다!

'한국형 건설사업관리(CM) 모델 첫 수출'...

연계 시범사업도 우리기업이 수주

2014.08.22.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건설사업관리(CM) 제도를 캄보디아에 처음으로 수출하고, 캄보디아에서 발주하는 첫 건설사업관리 시범사업도 우리 엔지니어링 업체가 수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8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건설사업관리제도 연구용역 1차년도 사업의 최종발표회를 개최하여 캄보디아에 한국형 건설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용한 시범사업 계약도 체결하였다.

캄보디아 건설사업관리제도 연구용역은 전체 2단계로, 1차년도에는 한국형 건설법령 및 로드맵 수립(2013.6.~2014.5. 3억 원), 2차 년도는 한국형 건설 매뉴얼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시행 등(2014.8.~2015.7. 6억 원)이다.

우리나라에서 건설사업관리제도를 수출하는 것은 캄보디아가 처음으로, 캄보디아 건설부가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시범사업⁵으로서 캄보디아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우리나라 업체가 수주한 것도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건설사업관리 시범사업의 본 사업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건설 중인 올림피아시티 프로젝트(총 공사비 : 3억 불, 공정률 : 50%)로 주거시설, 영화관, 쇼핑몰 등이 포함된 다중 이용 시설물이다.

캄보디아 건설부측은 한국의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용하여 건설 공정과 준공 이후 운영 단계에서의 건설공정 관리는 물론, 선진화된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캄보디아 건설사업관리의 수주 규모는 작지만 한국형 건설사업관리제도를 수출하여 수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으며, “캄보디아에 이어 건설사업관리제도 수출을 미얀마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기업이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의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천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기피·혐오시설 인식 전환,

'냄새나는 마을에서 잘살고 향기 나는 마을'로 탈바꿈

2014.08.22. 강원도 환경정책과

지난 5월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8.22일 사업현장인 소매곡리 마을에서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부가 예산지원 등을 통해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강원도는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과 행정적 지원을 맡기로 했으며, 홍천군은 실제 사업을 담당하면서 관련 조례제정, 특수목적법인(SPC)설립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주민들은 사업의 참여주체이자 일부 시설의 운영주체가 되며, 민간업체인 강원도시가스(주)는 도시가스 공급을 담당하고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하수·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밀집된 부지 등을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친환경에너지와 자원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소득창출 등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추진 될 수 있도록 구상한 것이 특색이다.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으로 바이

⁵ 시범사업 : 수행업체(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 계약금액(125만 불), 계약기간(14.8.~17.1월, 2년 6개월)



오가스, 퇴비 및 액비(물거름)를 생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 하게 된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로 전환하여 마을주민에게 값싸게 공급하여 가구당 연간 91만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퇴·액비시설의 운영을 마을공동체에 위탁하여 퇴·액비 판매 등을 통해 연간 52백만 원의 마을기금이 조성되고, 마을주민과 흥천군, 강원도시가스(주)가 공동 출자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서도 연간 52백만 원의 수익이 기대된다.

이 밖에도 해바라기와 야생화 꽃길 조성, 흥천강 수상레포츠센터 설립 등 관광기반 조성사업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상·하수도 설치사업도 추진된다.

시범 사업은 현재 설계 단계이며, 오는 10월에 착공하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완공되어, 모든 사업은 2016년 하반기 중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서울시, '옥상도 에너지다, 옥상흰빛 캠페인' 열어

시, 열섬현상 완화와 냉방 에너지 절약 위한 '옥상흰빛 캠페인' 시작해

2014.08.27. 서울특별시 에너지시민협력반

서울시가 열섬현상 완화와 냉방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옥상의 색을 하얗게 바꾸는 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28일 여성 듀오 '옥상달빛'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옥상흰빛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옥상을 하얗게 칠하는 사업은 시원한 지붕을 의미하는 '쿨 루프(Cool Roof)'라는 명칭으로 국내·외에서 추진되어 왔다.

햇빛과 태양열의 반사와 방사효과가 있는 밝은 색 도료를 지붕에 시공하여 지붕의 열기 축적을 감소시키는 공법으로, 특히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옥상녹화는 콘크리트 지붕에만 적용 가능한 반면, 쿨루프는 모든 지붕에 적용 가능하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국내에서는 창원시에서 시청 옥상 일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쿨 루프 사업 확산을 위해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신축건물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서는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쿨 루프 건물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금년부터 산하기관과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시범추진하고 성과를 검증하며, '15년부터는 2단계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Building Retrofit Project) 자금용자 대상사업의 범위를 옥상단열 및 차열 공사로도 확대해 쿨 루프 건물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쿨 루프를 포함하여 옥상녹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옥상에서의 에너지절약·생산을 비롯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물 특성에 맞는 적절한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는 쿨 루프 사업을 시민에게 알리고, 민간 부문의 동참을 확산시키기 위해 8월 28일(목) 10:30~11:20, 강남구 가로수길 '베이직 하우스' 건물 옥상(면적 약 200㎡)에서 서울형 쿨루프 '옥상 흰빛 캠페인' 첫 시범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직접 (주)노루페인트가 후원한 흰색 우레탄 방수 페인트(열 차단 성능 도료)를 옥상에 칠한 뒤, 야외에서 태양열조리기와 오븐으로 요리를 하는 '해바라기 식당'이 마련한 요리, 옥상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들도 맛보게 된다.

정희정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반장은 "옥상은 도시 표면적의 25%에 해당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간인 만큼 옥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도시의 환경·에너지문제에 대한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옥상 활용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확산된다면, 에너지 절약과 열섬현상 완화는 물론 새로운 녹색 일자리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손쉽게 고쳐!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8.4.~9.15.)

2014.08.03.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제 아파트 내 상가도 일반 상가의 경우처럼 별도의 행위신고 없이도 영업장 변경 등을 위한 간단한 칸막이벽을 철거 할 수 있고, 아파트 필로티 공간도 입주자 동의를 거쳐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4일부터 입법예고(8.4.~9.15.) 한다고 밝혔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현행	개정안
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작성하여 행위신고해야 함	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 철거는 일반 상가와 같이 행위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
필로티를 주민 편의시설로 변경, 사용할 수 있는 별도 규정 없음	필로티를 소유자 동의(전체, 해당 동 2/3이상)를 거쳐 지자체 장이 인정하는 경우 교육·휴게시설, 도서관(독서)실,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공동주택 관리현황은 단지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규정	공동주택 관리현황은 단지 홈페이지(인터넷 카페 포함), 게시판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② 다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 정비

현행	개정안
하자보수 청구 후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통보	하자보수 청구 후 사업주체는 15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통보
공구별(최소 300세대)로 분할하여 건설이 가능한 주택단지를 1,000세대로 규정	공구별(최소 300세대)로 분할하여 건설이 가능한 주택단지를 600세대로 규정

③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정

현행	개정안
사업계획승인 시 연접개발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 불명확	사업계획승인 시 연접개발 제한이 되는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개인인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법인인 경우 소속 임원을 포함)
입주자 모집공고 후 2% 이내의 대지지분 변경은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도 가능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도 가능한 2% 이내의 대지지분 변경(감소) 사유를 명확화하고, 이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 속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9월 15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안전사고 없는 건설업체, 입찰에서 우대한다!

안행부, 8월부터 지자체 입찰·계약 제도개선 시행

2014.08.04.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앞으로 지자체 공사 입찰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평가가 강화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이 더욱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예규를 2014.8.5.(화)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우수업체 입찰 가산점 확대

지자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균재해율보다 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는 입찰심사에서 가산점을 확대, 적용받는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건설재해율이 낮은 업체의 가산점 부여 대상금액을 현행 5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② 시설공사 입찰 적격 심사 시 시공실적 인정기간 확대(3년 → 5년)

최근 건설 업체들의 관급공사 수주물량이 축소됨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찰실적은 최근 3년분 실적만 평가하던 것을 최근 5년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입찰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③ 시설공사 계약의 원가심사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

지자체 관급공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원가심사 조정결과를 입찰공고 시 지자체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공개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건설업체에서 제기하여 왔던 ‘관행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하여 계약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예규 개정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업체 입찰 가산점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한 위법행위 등 사고를 발생시킨 업체는 입찰 시 불이익을 받도록 계약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방식 확 바뀐다

설계공모 대상 확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변경 등
관련 규정 개정

2014.08.08. 조달청 기술심사과, 시설기획과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 발주방식이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조달청은 8월 8일부터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확대 시행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및 기준을 변경하는 등 설계용역발주 업무를 크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 시 설계비 5억 원 이상은 디자인을 위주

로 평가하는 설계공모방식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2,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설계공모 심사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⁶ 사업에 우선 적용하여 수행하며, 해당업체 및 기술자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적용대상을 1억 원 이상 용역으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은 △설계공모 방식을 다양화하여 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설계공모 운영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적용 △평가절차 간소화 등으로 중소 설계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8월 8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설계공모 확대 등 건축설계용역 발주 방식의 변화가 최근 침체된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발주 방식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 모니터링, 관련 당사자 의견수렴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된다

국토부, 「층간소음 가이드라인」 마련

2014.08.12.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앞으로 다세대,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된다.

현재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주택에 한하여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층간소음이 원인

⁶ 맞춤형서비스 :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수요기관 중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없거나 시설공사 추진의 경험이 없어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의 과정별 업무(기획, 설계, 계약, 시공 등)를 대행



이 되었던 이웃 간 살인, 방화 등 사고사례의 대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설하였던 소규모 주택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 간 분쟁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8월 13일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동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되어 금년 11.29일부터 시행되므로 연말부터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 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과 기준 구분)

① 3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은 중량충격음:50dB⁷, 경량충격음:58dB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30세대 미만 아파트·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성능기준(중량충격음:50dB, 경량충격음:58dB)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로 할 수 있다.

③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공사감리자 감리 지침 명시)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리보고서 작성·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⁷ 중량충격음 :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경량충격음 : 장난감 등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이번에 마련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금년 8.13일에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11월부터 건축물 등에 ‘안전·범죄예방 기준’ 의무 적용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4.8.19.)

2014.08.17.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올해 11월부터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국토부가 고시하는 실내 건축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 건축 기준과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이나 고시원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건축

이는 최근 건축물에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범죄자를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어, 건축 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며, 개정 건축법 시행일(14.11.29)에 맞추어 현재 권고 사항으로 운영 중인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범죄예방 기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②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하는 건축물은 천장·벽·바닥 등 실내 공간에 칸막이나 장식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준형

이는 최근 건축물 안에서 증가하고 있는 미끄럼, 끼임, 충돌 등 생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어 실내 건축 제도와 기준 의무화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건축법 시행일에 맞추어 실내건축 기준을 고시할 예정으로, 화장실 바닥 등 미끄럼방지 기준과 벽·천정·바닥에 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식물의 재료(방화·흡음성 등)의 기준과 내부 공간에 칸막이를 설치 시 그 안전 기준 등을 규정할 예정이며, 현재는 권고사항으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에 있다.

③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 축조신고 필증 교부일로부터 3년마다 공작물의 유지·관리 점검표(부식·손상상태 등)에 따라 점검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

④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

첫째, 이행강제금 산정 시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다.

현재는 대수선(가구 수 증설 등) 위반, 도로 및 일조높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은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⁸.

둘째, 위반행위의 고의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 소유자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임대료 사실상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20%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읍·면지역 등은 건축조례로 이행강제금을 2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조기시정 유도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1회 차, 2회 차까지 20% 감경하여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금년 11.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7

⁸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반사항(구조, 피난·방화기준 등)은 현행대로 전체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

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종합병원 부지에 일반병원, 요양병원 설치 허용된다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9.1.까지 입법예고

2014.08.2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설치를 허용하고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군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2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동안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는 종합병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을 공급하기 위하여 일정규모(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함으로써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법상 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에 해당하면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입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자 등 병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휴게음식점(커피숍, 제과점 등)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편익시설의 설치로 병원 본래의 의료기능 수행에 지장을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초래하지 않도록 ① 숙소의 면적을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②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 간소화, 임대주택용지 탄력적 공급 허용

도시개발법 시행령·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4.08.27.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절차 간소화, 도시개발채권 매입 금액 경감, 공동주택 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 비율 탄력성 부여 등이다.

먼저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한 토지 공급 관련 사전협의 절차와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통보의무 절차를 폐지하는 등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건설업자나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종전에 비해 약 30~40% 경감⁹하여 매입 의무 대상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한편, 최근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

⁹ 공사도급계약금액의 5/100→3/100, 시행·허가면적 3.3㎡당 30,000원→20,000원

하 비율(60% 이상)만 유지하고 60㎡ 이하 및 85㎡초과 규모에 대한 배분 비율을 폐지하며,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비율(공동주택용지의 20~25%이상)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수요에 맞는 적절한 공동주택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00년 묵은 지적도 디지털화 땅 분쟁 해소 기여 울산시, 2012년부터 해당 필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014.08.04. 울산시 토지정보과

울산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¹⁰을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 지적재조사사업의 전체 사업량은 48만여 필지에 달하며, 이중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롭게 지적을 만드는 지역은 지적확정측 방법으로 디지털화 하며, 지적의 정확도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은 현재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시스템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 7만

¹⁰ 현실경계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GPS 등 최첨단 장비로 지상·지하의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100년 된 종이지적을 입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책사업

9800 필지(16.6%)는 지적재조사측량을 거쳐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12년 3월부터 '14년 7월까지 10개 지구 3,308필지 중 1개 지구 258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이 크게 해소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지를 현실경계로 조정하여 토지의 이용가치 제고 △지적도면의 디지털화로 스마트 토지정보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져 소유자가 직접 땅의 경계는 물론 이용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부동산종합공부 구축에 따른 효율화로 행정업무 시간과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면적의 증감에 따른 분쟁, 조정금 산정에 관한 이해의 대립 등에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와 대의적 합의 및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세종시로 오세요~ 입주 대학·병원에 건축비 25% 지원

8월 13일, 행복도시 자족시설 '지원기준' 시행

2014.08.11.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행복도시건설청 도시발전정책과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종합병원, 연구기관 등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졌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에 들어서는 자족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담은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족시설이 조기에 확정되지 못할 경우, 세종으로의 인구유입과 도시 활성화에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행정기

관 이전이 완료되는 '14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견인할 자족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지원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자족시설은 ①외국교육기관 ②지식산업센터 ③연구기관 ④국제기구 ⑤종합병원 ⑥대학이다.

(지원 기준) 또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양질의 자족시설을 유치하고자 했다.

특히 대학은 세계대학평가기관인 큐에스(QS: Quacquarelli Symonds) 또는 티에이치이(THE: Times Higher Education)로부터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200위 이내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고, 종합병원은 총의사 대비 연구참여임상의사 비율이 20% 이상이고, 연구전담의사의 수가 5명 이상인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 지원항목) 자족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비와 설립준비비 및 운영비¹¹를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금 지원규모는 건축비는 총건축비의 25% 이내, 설립 준비비는 6억 원 이내로 결정됐다.

(지원시기 및 절차) 보조 사업자에 대한 지원시기는 건축비는 착공이후, 설립준비비는 행복도시건설청과 보조사업자간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 지원되고, 운영비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 지원가능하다.

또한 지원신청서 제출이후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토록 하여 투명하게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했다.

(보완장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타 용도 사용금지는 물론, 부지매입 후 24개월 이내 건축물 착공, 보조금 정산 후 10년 이상 사업영위 및 재산 처분금지 등 의무사항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¹¹ 설립준비비와 운영비는 외국교육기관에 한함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에서는 “이번 지원기준 제정으로 자족시설 유지에 탄력이 붙어 행복도시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지원기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수치지형도 갱신’으로 안전한 창조도시 관리

현재까지 제작된 2,842도엽 중 올해 말까지 390도엽 갱신

2014.08.11. 울산시 토지정보과

창조도시를 향한 울산의 안전한 도시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수치지형도 갱신¹²’ 사업이 올해도 지속해서 추진된다.

울산시는 ‘지하시설물관리와 도시정보 관리 및 각종 공사설계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밀도가 높은 수치지형도¹³(1/1,000)를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난 1994년부터 제작·관리해 오고 있다.

특히, 광역시 승격 이후 도시의 고밀화와 팽창으로 도시계획 및 관리에 세부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주거·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울산 전체 면적(1,060.4km²)의 67.1%에 해당하는 2,842도엽(711km²)을 제작했다.

울산시는 올해도 수치지형도의 정확성과 최신성 확보를 위해 ‘국토지리정보원 위탁 갱신사업’과 ‘울산광역시 자체 갱신사업’ 등 수치지형도 갱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 위탁 갱신사업’은 국·시비 13억 4,000만 원이 투입되어 울주군 및 북구 일원의 주거·도심지역 340도엽(85km²)을, ‘시 자체 갱신사업’은 1억 9,000만 원이 투입되어 울주군 온산 및 청량과 남구 일원의 산업단지지역 50도엽(12.5km²)을 연말까지 갱

신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치지형도 갱신은 이미 제작된 해당 지역의 지형도를 중심으로 항공사진촬영을 이용하여 현지지리조사를 통해 변화된 지형을 수정하고 일치화시키는 작업이므로, 이를 수행하는 조사업이 방문하더라도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북도 주택개량사업 1조 193억 원 투입

농어가 혜택 지속 확대

융자금지원 6천만 원 확대 등 '14년 1,612농가 혜택

2014.08.14. 전라북도 토지주택과

노후 불량 주택 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4년까지 1조 193억 원을 투입하여 74,075동의 주택 개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작년에는 융자금지원 한도가 동당 5천만 원이었으나 실 건축비대비 융자한도가 적다는 농어민 여론을 반영하여 전북도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하여 올해부터는 1천만 원이 증가된 6천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대출금리도 3.0%에서 2.7%(만65세 이상 연 2%)로 인하된 바 있다.

올해에는 967억 원(농협자금 100%)을 확보하여 1,612 농가세대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며 7월 말 현재 1,086동에 대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71동은 완료되었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그동안 주택개량 물량을 '11년 1,127동, '12년 1,430동, '13년 2,173동, '14년 1,612동으로 꾸준히 확대하여 왔으며, 농어촌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에 맞춰 2%인 주택개량 융자금의 금리 인하 및 융자금 8천만 원으로 상향 건의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 등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¹² 변화된 지형을 중심으로 국가기본도를 수정하여 현지의 지형과 일치시키는 지도제작 과정

¹³ 지형의 형상 및 속성 등 지표의 각종 정보를 컴퓨터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제작하는 지도로 전자 매체로 표현되는 형태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북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물량 확보 등 전북의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다.

대전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위해 힘 모은다

민간대형건축공사장 관계자 간담회 개최

2014.08.22.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대전시는 지역전문 건설업체의 경쟁력강화 및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문건설업체와 힘을 모은다.

시는 관내 시공 중인 연면적 1만㎡ 이상의 민간 대형건축공사장 18곳의 건설업체 본사 임원 및 현장소장, 구청 관계자,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건설업체 본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연 4회 이상 하도급참여율 독려 △착공신고시 건설 업체와 MOU체결 △하도급 참여율이 높은 우수현장 표창 등이며 특히, 지역업체에 60%이상 줄 수 있는 공정을 정하면서 지역업체간 입찰참여 등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지혜를 모을 계획이다.

정무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지역전문업체의 참여비율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있으나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건설경기에 보탬이 되고, 나아가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을 확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대전시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19개 민간대형건축공사 현장의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은 63.3%를 기록하고 있다.



■ 민간대형 건축공사장 관계자 간담회 사진

부산시 도시재생 선도 지역 사업추진협의회 출범

8. 27.~9. 26.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사업추진의 시민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계획

2014.08.26. 부산광역시 도시재생담당관

부산시는 '부산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 사업 지역인 초량동 지역주민, 마을활동가, 지역언론사 및 부산시의회, 동구청, 동구의회, 국토교통부, 관련기관, 부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정부의 공식지원기구 등이 참여한 가운데,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부산시 도시재생 선도 지역(도시경제기반형) 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추진협의회는 선도 지역 활성화계획 수립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역 광장일원의 관문지역과 초량동 상업지역, 초량동 주거지역으로 3개 권역별로 운영하게 되며, 최초 사업설명회는 8월 27일 오후 2시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YMCA빌딩 14층)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에서는 지난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4박 5일간, 8개국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역 광장~북항재개발지역’에 대해 세계 각지의 건축대학생들의 참신한 건축적 상상력을 나누는 ‘2014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워크숍 기간 중 ‘다국적 토론회’를 열고 동구청 5급 이상 간부 및 구의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사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현재 부산항만공사에서 진행 중에 있는 ‘원도심 연계방안 및 보행데크 기본계획’과 국토교통부와 부산시에서 진행 중인 ‘부산지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발전방안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현재 ‘국가 도시재생 선도 지역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가가 시행하는 주민주도형 첫 도시재생 사업으로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전국에 총 86개 지자체가 사업 신청했으며, 도시경제기반형 2곳(부산, 청주), 근린재생형 11곳이 지정됐다.

부산시는 도시경제기반형 선도 사업에 4년간 500억 원(국비 250억 원, 시비 250억 원) 사업비를 투입한다. 특히, 선도사업의 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서 연계 가능한 각 부처의 사업들을 활성화 계획에 포함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도시경제기반형 선도 사업 이외에도 9월 말부터 구·군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며,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조례’를 9월에 제정하고,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 구성과 ‘(재)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 홍은동에 ‘청년 공공주택 협동조합’ 첫 선

보증금 1~2천만 원, 임대료 6~12만 원...

주변시세의 40% 수준으로 저렴

2014.08.28.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SH공사

서울시가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3탄으로 ‘청년 공공주택 협동조합’을 내놨다. 앞서 시는 강서구 가양동 ‘육아 공공주택 협동조합’과 중구 만리동 ‘예술인 공공주택 협동조합’을 선보인바 있다.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자율적 관리’,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시가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방안이다.

앞서의 공공주택 협동조합이 건설형이었다면 이번엔 서대문구 홍은동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2동을 매입, 전용면적 26~29㎡ 총 31호(1인 1실 20호, 2인 1실 11호)를 공급하며, 보증금 1~2천만 원에 임대료는 6~12만 원으로, 주변시세의 40% 수준으로 청년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했다.

운영방식에 있어선 기존과 동일하게 거주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스스로 사랑방을 운영하고 공공주택 관리 및 공동체를 운영토록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8일(목)부터 9월 5일(금)까지 청년 공공주택 협동조합에 거주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자립기반이 취약한 만 19세 이상 35세 미만인 청년 1인 가구(대학생 제외, 단, 2015년도 2월 졸업예정자는 가능)로, 월평균 소득 70% 이하(3인 이하 가구 3,224,340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우선 예정 공급세대의 1.5배수를 모집해, 선정된 예비조합원을 대상으로 9·10월 주거공동체 및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10월 29일(수) 관련 전문가 면접 및 입주지원서 등을 통해 최종 42명의 입주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 공공주택 협동조합은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 및 사회초년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청년 주거문화의 한 유형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시, 건설 분야 ‘안전한 대전’ 행보 눈길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건설 분야 아카데미 열려

2014.08.28.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실

대전시는 28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시·구, 공사,공단 등 건설분야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분야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건설기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전한 대전 만들기’ 일환으로 건설 분야 공무원간의 업무연찬 및 정보교류 기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 산하 건설 분야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과 새롭게 도입되는 각종 기술 관리에 대해 교육과 토론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토교통부 유충현 사무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제도’와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내용’, ‘싱크홀 대책’에 대한 강의를 통해 “건설 분야에서의 안전은 일선 담당자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밝히면서 “교육과 상호 연찬을 통해 전문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려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구의 공무원들은 “건설기술제도와 관련 건설안전기준 상향, 법령 개정사항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연찬과 함께 ‘싱크홀 대책’ 등 정보교류와 경험의 공유를 통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대전시 정관성 정책기획관은 “교육 참석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 분야 아카데미 확대 시행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와 자치구, 산하기관 건설 분야 담당자들의 창조적인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통해 안전한 대전을 만들어 가는데 시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설 분야 아카데미 사진

강화 선두마을 디자인 공모전 개최

관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으로 8.13일까지 사전 접수,
9.22일까지 작품 제출

2014.08.11.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추진단

인천시는 강화군 선두마을에서 추진 중인 「강화 선두지구 마을경관 형성사업」의 일환으로 경관마을인 선두마을을 상징하는 브랜드 발굴과 일일장터에 쓰일 이동식 가판대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두마을은 강화군 길상면 선두 4, 5리 일원에 위치한 해안마을로서 국토교통부의 국비를 지원받아 경관형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2014년에는 경관협정체결과 마을 내 쉼터정비, 경관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추진 중이며, 현재 경관협정은 영화를 설립하여 이 모든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2014 선두마을 경관형성사업 디자인 공모전'은 주민들이 경관사업을 통해 개선된 선두마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소득창출방안으로 '일일장터'를 개설하기로 해 사업추진협의체에서 이를 돕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

'2014 선두마을 경관형성사업 디자인 공모전'은 인천시와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인천시 관내 대학교 재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선두마을 BI(Brand identity)와 캐릭터 개발과 이동식 가판대 디자인 2개 분야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선두마을 BI와 캐릭터는 마을 안내판, 선두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포장, 마을깃발과 지도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이동식 가판대 디자인은 바로 제작하여 일일장터에서 쓰일 예정이다.

공모전 참가신청은 이번 사업의 수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로 이메일(kshnice7@naver.com)로만 접수를 받는다.

사전 접수는 8월 13일 18:00까지이고, 작품 제출은 9월 22일까지이며, 신청서를 비롯한 각종 자료는 선두마을 홈페이지(<http://seonduri.co.kr>)에서 볼 수 있다.

수상작품은 외부전문가 및 마을주민들이 심사해 선정하고, 우수작은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된다.

이번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이번 사업에 인천시와 협약을 맺은 대학교 재학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학생들에게도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 공모전 안내문 일부

서울시·자치구 1,000명 규모 생활권계획 참여단 모집

참여단은 2회 이상 워크숍 통해 지역의 강점과 문제점 도출

2014.08.3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추진반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주민 참여형 도시계획인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참여단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시 전역을 5개 권역생활권, 140개 지역생활권(3~5개 행정동 단위)으로 세분화하여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생활권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 중이다.

생활권계획이란 생활밀착형 상향식 도시계획으로서 서울시는 지역의 문제점과 특성을 담아내기 위해 자치구별 30~50명의 참여단을 모집하며, 서울시 전체로는 총22개 1000여명 규모 이다.

생활권계획 참여단은 2회 이상 워크숍을 통해 지역생활권의 발전구상을 위한 주민 토론의 기회를 가지게 되고, 지역생활권의 현안 이슈와 지역 특화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의 발전방향과 생활서비스시설 주민 요구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참여단 워크숍 결과는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이슈별 계획 부문에 반영하며 참여단의 모든 의견은 생활권계획 참여단 리포트로 발간하여 지역 단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자치구별 시범지역생활권 해당 행정동 일반주민과 주민자치위원 10명 내외로, 일반주민 5명은 공개 모집하고 주민자치위원 5명은 자치구 추천으로 선정한다.

생활권계획 참여단이 되고 싶은 주민은 대상 행정동을 확인 후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참여단 모집과 워크숍 일정 등 세부적인 정보는 생활권계획 홈페이지 (<http://planning.seoul.go.kr>)와 자치구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역주민이 지역에 대한 전문가라는 인식 하에 출발한 생활권계획 참여단을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역특성을 잘 반영한 맞춤형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여단 모집 포스터

노르웨이 건축정책(2009)

김영현_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노르웨이는 1992년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건조환경의 문화적 측면: 공공환경 심미성 관련 실행 프로그램(Surroundings as Culture: Action Programme for Aesthetics in Public Environment)」을 시작으로 1997년 제2차 건축정책 「공공건축 및 건설사업의 심미성(Aesthetics in Government Building and Constructions)」, 2009년도에 제3차 기본계획(Architecture. now Norwegian Architectural Policy)을 수립·발표하였다.

노르웨이 건축정책은 건축분야의 주요쟁점사항으로 ①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②사회적 변화, ③지식과 혁신 등 3개 사안으로 정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6개 추진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내용 중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과제, 노르웨이 건축물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타 유럽국가와 비교되는 특성이라고 한다면, 건축정책 서두에 '건축의 정의'에 대해 일반적 의미, 학문적 의미, 산업적 의미 등 건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다각적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가장 다양하고 많은 중앙부처가 건축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노르웨이 건축정책의 6개 추진전략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과제에 대해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정책내용 구성

노르웨이 건축정책에서는 건축에 대한 주요쟁점으로 ①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관련(sustainability and climate change), ②사회적 변화(change and transformation), ③지식과 혁신 관련(knowledge and innovation) 사안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6개 추진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6개 정책방향으로 1)친환경적이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축물 조성, 2)우수한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는 도시 및 인구집중센터 개발, 3)문화적 환경 및 건축유산 보존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조, 4)건축에 대한 첨단지식 보급, 5)정부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 6) 건축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이다.

건축정책에 참여하는 주요 부처 및 역할

여성가족부(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행정부(Ministry of Renewal and Administration),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Care Services), 지방정부·지역개발부(Ministry of Local Govern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문화·종교부(Ministry of Culture and Church Affairs),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농림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환경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석유에너지부(Ministry of Petroleum and Energy), 교통·커뮤니케이션부(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등 13개의 부처가 건축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각 부처별 건축정책에 담당하고 있는 업무영역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여성가족부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 코디네이팅을 담당하는 부처로써 유니버설 디자인 및 시설 접근성 제고에 대한 건축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 2) 행정부는 정부소유의 행정시설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로써 공공 건설사업 및 부동산 관리기관인 “Statsbygg”를 중심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자문, 빌딩 커미셔너, 시설 관리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3) 국방부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면적의 공공토지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부처로써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방호시설에 대해 문화유산으로써 건축자산을 보존·활용하는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방시설관리위원회(Norwegian Defence Estates, FB)는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건물, 인프라 전반에 대한 전담하는 전문조직으로 국방시설에 대한 투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4) 보건복지부는 건축과 건강, 웰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정책으로써 최근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의 보급·관리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 5) 지방정부·지역개발부는 주택 및 건설정책을 주관하고, 관련 지원에 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로써 건축설계, 친환경 자재 이용, 에너지 효율성, 커뮤니티 디자인 등에 대한 관련 법·제도 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 6) 문화·종교부는 문화 및 체육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를 주관하는 부처로써 노르웨이 건축센터인 Norsk Form과 국가 예술건축디자인박물관(National Museum of

Art, Architecture and Design)을 관리하고 있다.

7) 교육부는 산하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으며, 건축과 관련된 오슬로 건축디자인 학교,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 베르겐 건축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8) 농림식품부는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농촌시설에 대한 신축, 지형에 대한 공간분석, 유휴 농촌시설에 대한 활용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9) 환경부는 정부의 환경정책 중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문화유산 사이트의 보존 및 이용, 수질 좋은 해수 보존 및 독신 억제, 안정적 기후 및 청량한 산소 확보, 생태계 다양성 보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0) 통상산업부는 국제전시 사무국 BIE멤버십을 관리하는 부처로서 노르웨이 건축산업 위상을 제고하는 정책과 관련이 있다. 산하에 지난 10년간 노르웨이 건축의 국제적 프로파일링 제고를 위해 기여한 노르웨이 디자인위원회(Norwegian Design Council)를 담당하고 있다.

11) 석유에너지부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코디네이팅을 담당하는 부처로써 관련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공기업 에노바(Enova)를 담당하고 있다.

12) 교통·커뮤니케이션부는 항공, 도로, 철도 등 네트워크 분야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 및 평가, 이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 및 예산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3) 외교부는 국제적인 문화협력사업과 노르웨이 건축의 국제화, 관광산업의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 건축을 전시, 프리젠테이션, 세미나 등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수단으로 인터넷 포털 'norgesportalen'을 관리하고 있다.

건축정책 6대 추진전략별 주요내용

①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

-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소비 감소, 환경 및 건강에 유해한 물질 생산 억제,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주택 및 건설부문의 환경실행계획 수립(New environmental action plan for the housing and building sector 2009)
- 건축물 에너지 성능요구 기준 강화 및 건축물 전생애주기 환경 평가
- 패시브 하우스 건축기준 개발 및 보급 확대

- 저에너지 프로그램 도입으로 빌딩 및 인프라시설의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
- 바이오에너지 프로그램 확대 : 농산업의 바이오에너지 이용과 우드칩 활용, 빌딩 구조에 맞춤형으로 건축되는 소규모 바이오 원료 플랜트에 대한 투지 지원 등
- 에노바(Enova) 운영: 주택, 빌딩, 인프라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신축 주거와 상업 시설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정부 계획에 따라 에노바는 약 650동의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을 지원
 -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하는 지역난방시스템 설치, 빌딩 난방 시스템의 바이오 에너지 온수시스템으로의 전환프로그램 마련
 - 에너지절감에 대한 혁신적인 신기술 보급 지원 프로그램 마련
- ‘미래의 도시(Towns of the future)’사업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환경부 주관의 녹색도시 시범사업
 - 13개 대규모 도시지역으로 오슬로, Baerum, 드람멘(Drammen), 사릅스보르그(Sarpsborg), 프레드릭스타(Fredrikstad), 포르스그룬(Porsgrunn), 시엔(Skien), 크리스티안산(Kristiansand), 산네스(Sandnes), 스타방에르(Stavanger), 베르겐(Bergen), 트론헤임(Trondheim), 트롬쇠(Tromsø) 등에 적용
 - 탄소중립 시범도시로써 관련 우수사례인 오슬로-드람멘 도시 및 주택전시 시행
- 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 감축 프로그램 : 에너지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 가능하며 친환경적인 난방 시스템 도입, 건축물별 에너지 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준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 친환경 및 재생가능 소재로서 목재사용 증대
- Statsbygg 주관하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 현재 건축물 계획, 시공 및 운영 단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는 웹 툴 개발

- 빌딩에너지 라벨링 제도 운영
 - 에너지 이용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개선하고, 주택과 상업시설의 매매 및 임대 시 보다 정확한 가치 평가 지원
 - 1,000㎡이상의 모든 상업시설에 적용되며, 매매 또는 임차대상인 소규모 시설 및 주택에도 적용
 - 에너지 라벨링과 더불어 에너지, 환기시스템, 보일러에 대한 정기적인 에너지 평가 도입 예정
- 기후변화에 대한 시각적 자료 제공 : 기후변화 정보를 시각화하고, 위기지역 맵핑, 해수면 상승 및 지표수 관리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 평가 등 수행

② 우수한 건축품질 확보를 위한 도시 및 인구집중센터 개발

- 지자체 건축인력 역량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공공조직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 공공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유관조직간 협력체계 구축, 역량이 부족이 지자체 지원을 위한 중앙 자문서비스 개발
- 사회취약계층 밀집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 개발 프로젝트 추진
- 친환경적 교통체계 강화
 - 대중교통 이용 증대 전략과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독려 전략 추진
 -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친환경적인 교통체계 정립을 위해 개별 운전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교통 측면에서의 효율적 토지이용 정책 마련
- 자연지형의 환경적 요소 보존
 - 무분별한 별장 신축으로 인한 환경적 가치 훼손 및 에너지 소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악지역에 임대 가능한 캐빈, 숙박시설 제공
- 건축 및 건설, 환경 디자인 관련 지식 강화

- 건축 전반에 대한 지식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건설, 환경디자인 교육과정, 인터넷 교육 과정에 대한 웹포털 개발
- 어린이 공간이용 패턴 파악 및 관련 시설 개발시 적용
 - 노르웨이 건축센터 Norsk Form 주관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공간 이용 현황에 대해 기록할 수 있는 디지털 맵핑 툴을 개발하고, 이를 계획과정에 활용
-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비하여 노인계층을 위한 주거 모델 개발
-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건축승인 과정의 전산화 시스템 도입
 - 국가 빌딩기술행정기관(National Office of Building Technology Administration, BE)에서 운영하는 'Byggsok'은 건축승인 과정의 준비, 제출, 관리를 전산화한 시스템
 - 'Byggsok-plan'은 민간 건축허가승인 전 과정에 대한 가이드, 체크리스트, 템플릿을 제공하며 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지자체에서도 'Byggsok-plan'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 가능
- 문화유산 검색 웹사이트 운영
 - 노르웨이 문화유산국의 데이터베이스이자 문화유산법(Cultural Heritage Act)에 의해 보존되는 모든 문화적 유산의 데이터베이스인 'Askeladden'의 정보 이용
- 역사적 도심부의 보존
 - 2009년 정부는 노르웨이 문화유산국을 통해 75개 도시 및 소도시의 국가 문화 유산지 관련 데이터베이스인 'National Interests in Towns(NIB)' 데이터베이스¹⁴ 운영 시작
-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법률 강화
 - 일반 대중을 위한 신축 건물, 인프라, 공개공간, 특히 관람객이 방문하는 공공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규제 마련

¹⁴ 문화유산 관리 행정조직,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이 행정 목적, 토지이용계획, 건축허가 승인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다 예측 가능한 계획과정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새로운 계획 및 건축법률 준수가 용이하도록 지원

-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가이드 및 보고서 발간 · 배포
- 8개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3년간 지역차원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극 도입

③ 문화적 환경 및 건축유산 보존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조

- 공공시설 유형별 국가 차원의 보존시설 계획 수립(national conservation plan)
 - 문화유산법(Cultural Heritage Act)에 따라 문화재 지정 및 보존 건물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는 계획으로 1000동 이상의 건물에 대한 실질적 보존 업무 수행
 - 공공자산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획이며, 16개 중앙부처 및 12개 소속 공공기관에 의해 추진
-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군사요충지 활용
 - 국방부는 14개 국가 요새를 포함하여 다수의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군사적 구조물로서의 특성을 보존
 - 일레로 콩스빙에르 군사시설(Kongsvinger Fortress)을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한 우수 시범사례
- 노르웨이 석유, 에너지, 수자원 역사 강조
 - 노르웨이 석유 박물관(Norwegian Petroleum Museum)은 노르웨이에서 석유가 발견된 1960년대 중반 시점부터 석유 산업의 기술적 발전에 대한 역사를 전시하고 있으며, 현재 주요 석유 및 천연가스 필드에 대한 기록화 작업과 석유산업 관련 문화적 유산 계획 수립
 - 엘베룸(Elverum)에 위치한 노르웨이 삼림 박물관(Norwegian Forest Museum)과 보존시설로 등록된 발전소인 튀소 1호(Tysso I)에 위치한 노르웨이 수력발전소 박물관(Norwegian Museum of Hydropower and Industry)과 협력하여 새로운 박물관 건립 추진
- 농림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와 환경부 주관으로 다양한 20개 문화적 지형을 선정하여 기록화하고 구체적인 보존 사업 추진

④ 건축에 대한 첨단기술 보급으로 건축디자인 수준 향상

- 건축분야 지식체계 현황조사 및 연구 추진
 - 주요 연구주제로는 노르웨이 물리적 환경 변화 속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 예술적·문화적 표현매체로서의 건축, 건축물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공공의 역할, 건축과 건설 산업의 혁신 등이다.
 - 오슬로 건축디자인학교(Oslo School of Architecture and Design, AHO),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NTNU)주관으로 건축분야 연구 프로그램 진행
- 8개 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를 지정하여 건축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연구 진행
- 친환경적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학제 연구센터 설립
 - 노르웨이 생명과학대학(Norwegian University of Life Sciences, UMB) 주관으로 다양한 전문분야 및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연구사업에 대한 코디네이팅, 정보보급 등의 역할 담당
- 건축이론 및 역사 연구센터(Centre for Architectural Theory and History, CATH) 개발
- 실무에 기반한 첨단 설계기법 연구 추진
 - 기술적, 산업적, 사회적 변화에 민감한 건축 전문분야와 건설산업의 발전에 위한 새로운 첨단기술 및 전략에 대한 연구 진행
- 대학기관 간 협력 강화
 - 건축을 문화적 산물과 정체성을 표상하는 수단으로써 접근하는 연구 필요성을 기반으로 건축품질에 관한 환경, 에너지, 유니버설 디자인, 실무, 지역개발에 대한 주제로 대학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국가차원의 건축역량 강화 및 정보교류 센터 Housing Bank
 - 지자체, 공공조직, 건설산업 간 관계 형성에 중심적 역할 담당하고, 정보교류를 위한 건축관련 웹사이트, 컨퍼런스, 워크숍, 이벤트 등 운영
- 노르웨이 건축센터 Norsk Form의 지속적 발전

- 오슬로 트리엔날레(Oslo Triennale)
 - 3년주기로 가을에 전문가와 일반대중을 위한 전시, 컨퍼런스, 기타 공공이벤트를 운영하여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정보 축적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
 - 현재까지 오슬로 건축 트리엔날레는 3차례에 걸쳐 운영되었으며, 오슬로 건축디자인 학교(AHO), 노르웨이 건축가협회(Norwegian Architects Association, NAL), 오슬로 건축가협회(Oslo Architects Association), Oslo Teknopol, Norsk Form의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
- 노르웨이 예술건축디자인 박물관(National Museum of Art, Architecture and Design)
 -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축 도면 컬렉션(350,000장 이상)과 모형, 노르웨이 건축 발전과 관련한 기타 기록물을 소장
 - 2008년 노르웨이 예술건축디자인 박물관은 오슬로 Bankplassen에 건축을 위한 새로운 전시공간을 개관하였으며, Sverre Fehn에 의해 설계된 새로운 전시 파빌리온은 1830년 건립된 Norges Bank 빌딩(건축가: C.H. Grosch)을 개조한 것임
- 노르웨이 도로관리 기관(Norwegian Public Roads Administration)의 ‘국가 관광 루트(National Tourist Routes)’ 사업을 통한 신진건축가 발굴·육성
- 유로판 노르웨이(Europan Norway)
 - 유로판은 유럽의 40세 미만 젊은 건축가, 조경 건축가, 계획가들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공모전이며, 2년마다 개최되고 유럽의 60개 이상 도시가 참여
 - 유로판 노르웨이 재단은 노르웨이 유로판 공모 운영 주체이며, 이사회에는 오슬로 건축학교(Oslo School of Architecture),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베르겐 건축학교(Bergen School of Architecture), 노르웨이 건축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Norwegian Architects), Norsk Form, Housing Bank 모두 포함
- 와일드 카드 제도(Collaboration between young and experienced architects - the wild card scheme)
 - 젊은 건축가들의 시장 접근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초청에 의한 공모전은 과거 경력

또는 경험에 의한 사전심사(prequalification)를 통과해야하기 때문

- 최초 덴마크에서부터 와일드 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에서도 도입 예정

덴마크 와일드 카드 제도(The Wild Card scheme in Denmark)

- 덴마크 건축센터(Danish Architecture Centre, DAC)는 덴마크 건축가협회(Architects' Association of Denmark, AA), Danish Competition Authority와 협력하여 와일드 카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젊은 건축가들의 건축 공모전 참여 독려
 - 젊은 건축가들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발주자의 경제적 손실 우려에 의한 젊은 건축가 고용 회피 상황을 개선하고 있으며, 발주자에게도 신진 건축가에 대한 정보 전달의 역할 수행
 - 와일드 카드 제도의 4부문
 - 와일드 카드 리스트는 젊은, 신진 건축가 사무실에 대한 개요 제공
 - 젊은 건축가에 의해 수행된 성공 사례 10개 소개
 - 발주자들이 신진 건축가를 공모전에 초청할 수 있도록 덴마크 건축가협회에서 가이드 제공
 - 덴마크 건축센터와 덴마크 건축가협회가 주관하여 젊은 건축가, 소비자, 파트너들을 소개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제공
 - 이러한 와일드 카드 제도는 2009년에 평가 예정이며, 관련 정보는 www.dac.dk/wildcardordning에서 열람 가능
-

⑤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

- 정부 주관 공공건축 공모전 운영
 - 정부는 국가에서 가장 큰 발주자로서 수준 높은 품질의 건축물 조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 수행
 - 1999년에 제정된 공공발주법률(Public Procurement Act No. 69 of 16th July 1999)은 모든 공공발주 사업이 공모를 통해 추진되어야 함을 규정
 - 대부분의 건축 공모전은 Statsbygg(공공 건설사업 및 부동산 관리기관, Directorate of Public Construction and Property)에 의해 운영
 - 공모전의 형태는 계획공모, 설계공모 또는 초청에 의한 공모로 구분되며, 공모 형태에 대한 결정은 개별 사업의 특성,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과업 범위 등의 통합적인 고려를 통해 결정

- 공공부문은 친환경 자재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선도해야 하며, 모든 소비 및 생산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정책 마련
 - 정부 실행계획인 「2007-2010년 공공발주 사업의 환경적 및 사회적 책무(The environment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public procurements(2007-2010))」는 공공조직의 자재 구매 등에 있어 기후변화 및 에너지 효율성 사안이 최우선순위로 고려
- 공공공간 및 건축물을 위한 예술 정책이 존재하며, 정책 내용은 노르웨이 공공예술 관련 기관인 KORO(Public Art Norway, KORO)에 의해 추진
- 노르웨이 군사시설위원회(The armed forces' architecture council)
 - 모든 군사시설의 기획, 건설사업 프로그램 및 계획 등 건축품질 확보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전문성 및 경험이 인정되는 3인의 건축가로 구성
- 국가적 관광 루트 개발(National tourist routes)
 - 노르웨이 도로행정기관(Norwegian Public Roads Administration)은 현재 국가 관광 루트(National Tourist Routes)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프로그램의 핵심은 도로와 주변 경관 간의 관계 설정
 - 운전자 입장에서의 뷰포인트 설정, 휴게지점에서의 창의적인 건축물 건립 등 노르웨이의 관광지 개발
 - 비도시 지역 관광전략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18개 루트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마케팅 중
- 공공기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인프라 시설의 품질 확보
 - 도로, 철도, 교량, 터널 건설 등 인프라 사업은 다수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간 협조를 필요로 하며, 자연 및 건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시설의 품질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
- BIM(Building Information Management) 활용 확대를 통해 사업 과정에서의 업무절차 및 소통 간소화

⑥ 건축의 국제적 위상 제고

- 노르웨이 예술 및 문화의 해외 홍보를 위해 노르웨이 건축 프로파일링을 우선순위 과제로 설정
- 문화 관련 또는 노르웨이를 홍보하는 정보의 확산 측면에서 외교서비스를 통한 노르웨이 건축의 국제적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강화
- 우수건축을 전시함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관광지로서의 노르웨이 홍보 병행
- 인터넷 기반 정보 보급 시스템의 강화
 - 건축센터 Norsk Form은 웹상의 다양한 언어 지원을 통해 인터넷 기반 정보 보급을 강화하고, 매달 영문으로 제작된 노르웨이 디자인 및 건축 관련 소식을 국제 미디어, 전문가 등에게 보급
 - 도시 설계, 건축, 빌딩 및 환경 디자인 관련 수상내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노르웨이 건축을 홍보
 - 19개 언어로 지원되는 외교 서비스의 인터넷 포털인 'Norgesportalen'은 기타 전문적인 정보 채널 및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될 예정이며 언어도 23개로 확대하여 운영 예정

한양도성박물관



서울 한양도성의 역사와 미래가치를 담고 있는 한양도성박물관이 지난 7월31일 개관했다. 한양도성 낙산구간 시작점인 홍인지문(동대문) 옆 동대문성관공원에 위치한 한양도성박물관은 낙산구간 탐방로와 바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다.

서울 한양도성은 조선의 도읍인 한성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되었다. 전체길이 18.627km에 이르는 한양도성은 현존하는 수도의 도성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도성의 기능을 수행했다. 또한, 조선시대 성벽 축조 기술의 변천, 발전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역사의 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문화유산이다.

600여년의 전통과 백성들 땀이 뻗 민본사상의 결정체인 한양도성은 자연친화적이고 국민적 참여 속에 축조되었다는

점에서 진정성과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 11월 23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공식 등재되었다.

한양도성박물관은 홍인지문(동대문) 근처 옛 이대병원을 리모델링한 곳으로 한양도성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고 있는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한양도성과 세계의 성곽유산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비한 한양도성정보센터와 학습실을 갖춘 문화 공간이다.

현재 기획전시실에서는 개관기념 한양도성 발굴유물 특별전 ‘남산에서 찾은 한양도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기획 전시로 서울 한양도성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글 · 사진 이경진(서울 한양도성 탐방, 한양도성박물관 소개글 참고)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도시 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 건축자산 DB를 구축·서비스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건축 서비스산업 육성 등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31-90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동 706-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B 706-1, 230 Simin-dae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431-908, Korea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